

# 개정 저작권법으로 비상 걸린 출판계

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전송권으로 논란 일어…시행령 제정이 관건

출판계가 개정된 저작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은 도서관의 전송권을 명시화한

28조 2항. 이 개정법안이 본래의 취재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는 물론, 출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출판계의 중론이다.

구립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저작권법' 중 일부 조항이 출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조항은 신설된 28조 2항으로,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해 다른 도서관에 대해 도서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판계는 이 조항이 도서출판물에 대한 도서관의 무제한 복제와 전송을 보장, 저작권 보호라는 기본 입법취지를 위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조항에 따라 만약 한 도서관에서 디지털 출판물을 전국의 도서관에 전송·복제하게 되면, 출판 인프라가 일거에 무너질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 논란 일으킨 도서관 전송권

해당 조항은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한 문화관광부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저작권 보호의 예외사항으로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출판계는 지난 해 8월 공청회에 서 제시된 안에는 해당 조항이 도서관의 관내전송만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 11월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전송권이 확대됐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의 한 실무자는 "관외 전송권에 대한 정보통신부와 도서관들의 비공식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외부의 요청보다는 저작권의 보호와 전자도서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실무자는 "해당 조항은 상호전송과 관내열람만 허용하고, 출력은 금지하는 선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전까지 마련될 시행령에 명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판계는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열람만 할 수 있겠느냐"며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늘어나면 관내 출력이 이



지난해 8월 1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장면.

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저작권위원회 김종수 부위원장은 "불법 복제·전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해당조항을 철폐해야 한다. 그것이 안된다면, 출판물의 다운로드와 출력을 금지하기 위해 트랙킹 장치(복제기록보존장치)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협'의 고흥식 차장은 "해당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이미 디지털화된 도서와 종이책 형태의 도서를 디지털화해서 전국의 도서관에 전송·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인 경우, 전국 2백여개의 대학도서관들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출판계 내부에서는 이 경우 도서관 수요에 의존하는 학술·전문도서 출판사들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출판계의 우려에 대해 도서관계의 입장은 다르다. 일반 도서의 경우, 디지털화하는 데 드는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 문제가 걸려 디지털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출판물은 정부간행물과 저작권이 소멸된 고문

서와 구한말 사료, 저작권자와 협의가 쉬운 학위논문과 학술지 등에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서관들의 중복 디지털화가 국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며 이번 조치는 디지털화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수 부위원장은 "전자도서관의 구축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분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이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저작권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화관광부의 실무자는 "다른 도서관에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들어 "도서관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에게 관외 서비스하려면 저작권자를 찾아나서야 한다. 복사권 집중관리기구 등의 설립을 통해 도서관이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정과 보완책 마련이 관건

'출협'은 지난 5일 업계의 의견을 모아 이번 파문에 대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은 ▲ 개정 저작권법 제28조 2항을 완전 철폐하거나, 도서관 간의 전송·복제가 허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재개정할 것 ▲ 만약 재개정이 안될 경우 보완 조치로 도서관 간의 복제·전송 시 기록 보존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열람용 컴퓨터를 화면만 볼 수 있는 단말기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저작물의 내용을 디지털화할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것 ▲ 해당 도서관은 복제·전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행령에 포함시킬 것 등이다.

출판계의 반발이 거세자 문화관광부가 진화작업에 나섰다. 최근 문화관광부와 출판계 인사들은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시행령에 도서관 컴퓨터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폐쇄하거나 출력을 금지하는 등 무단 복제·전송을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11억 증액 할 것 등을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판계가 경계심을 완전히 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출판계 일각에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위헌 소송 문제까지 제기했으나, 제28조 2항의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위헌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저작권법을 전공한 한 교수는 "조항의 내용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조항 자체가 저작권 보호의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하지만 과급효과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펼친 공방이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정은 기자

### 발터 벤야민: 예술, 종교, 역사철학

N.볼츠, 빌렘 반 라이엔 지음/김득룡 옮김/192면/6,000원

20세기 최고 문예 비평가인 벤야민의 삶과 사상을 유기적으로 체계화하여 그의 예술, 종교, 역사철학을 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 늘 망명 상태에 있었던 벤야민의 운명과 사상의 관계를 흥미롭게 보여주며, 그의 작품들이 오늘날의 철학적 담론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명료하게 다루고 있다.

### 大學 哲學

岑溢成 지음/황갑연 옮김/224면/7,000원

유학의 주요 경전 《大學》에 관한 해설서. 정치인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와 함양해야 할 품덕을 제시하는 정치 철학서로서의 《大學》을 다루며, 주자의 《대학장구》를 기본으로 《大學》의 전문을 자구 하나하나까지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어 유학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현대 종교학과 사회과학

F. 훼일링 역음/이용범, 이진구 옮김/432면/13,000원

종교 연구와 관련된 사회과학의 이론적 관심, 학문적 경향, 연구 주제를 학문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으며, 사회과학적 종교 연구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들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종교학의 주요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암시한다. 사회와 문화와의 연관 속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